

수출입 화물 “완전히 발 묶였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파업 강행 ... 5월13일부터 물류대란 불가피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13일부터 항만이 울스톱되는 등 물류대란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화물연대가 5월12일 오전 노정·운송기업과의 밤샘협상을 통해 경유가 문제를 빼고는 대부분 얻을 것은 얻는 상황에서 파업 강행결정을 내리자 정부와 항만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정부 요구사항 가운데 경유가 인하를 얻어내지 못하고는 파업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최대쟁점이었던 운송료 인상을 등 핵심 쟁점은 남겨두고 있어 해결 없이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합원들은 협상단이 12개 쟁점 중 손쉬운 것만 합의하고 핵심쟁점들은 남겨둔 채 파업을 철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여기에서 물러설 것이었다면 파업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몇일만 더 파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파업을 철회하면 몇달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점도 파업강행을 부채질했다.

화물운송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도 파업강행의 한 이유다 됐다. 지도부가 정부와 파업취소 일정을 잡아놓고 협상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 조합원들의 불신감을 키웠으며, 여파는 파업강행 결론으로 나타났다. 10일 오후에도 집행부가 18일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와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결국 몇 시간만에 철회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정부와 대형화주들에 대한 불신도 파업강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합원들은 파업사태를 기회로 정부를 누르고 기업들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공평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파업강행 결정과 관련해 12일 오후 10시 긴급 대국민담화를 내고 “화물 비상 수송대책을 즉각 실행하고, 화물연대가 비상수송대책 집행을 방해하거나 운송거부 집단행동을 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할 것”라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담화에서 수출입 화물의 수송지연을 해소하고 부산항에 적체돼 있는 컨테이너를 조속히 반출시키기 위해 부산항과 경인ICD 간 컨테이너 임시 화물열차를 하루 230량 늘리고 운송회사 직영차량과 자가용 화물차량, 지입차주 차량 중 비화물연대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물자부터 우선 수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상바지선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전용부두로 이동시키고 군이 보유한 트레일러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납기 차질 우려가 있는 물자부터 긴급 수송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권력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대화로 타결노력을 하려는 화물연대 대표나 회원들과는 신의와 성실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14>